

[2010 가계부채①]

2003 카드대란의 추억과 2010년 가계부채

2010.2.22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가계 부채 부실의 원조,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
2. 부실축적의 4대 환경요인
 - 고용 구조 변화와 소득 불안정성
 - 가계 부실의 길을 터준 금융 자유화, 규제완화
 - 빠르게 내려간 금리
 - 들뜨기 시작한 자산시장
3. 평범한 한국 가정을 상대로 시작된 금융수익 쟁탈전
4. 4천만 장이 1억장이 된 신용카드사 매출 경쟁
5. 6배로 늘어난 신용카드 대출
6. 신용카드 부실전야, 주요 지표는 나쁘지 않았다



<http://saesayon.org>

요약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는 신용카드사의 과잉 경쟁 속에서 가계의 신용카드 부실이라는 약한 지반을 뚫고 최초로 가계 발 국내 금융위기가 터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돌아선 한국경제가 5년 만에 겪은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1호 째 된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는 주도적으로 신용카드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쪽에서는 규제 금융으로 자본을 확충한 금융회사들이 공격적으로 가계를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불안으로 취약해진 구매력을 신용카드로 대체해서 소비를 늘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신용카드 부실 위험이 자라나게 되었던 환경이다.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규제완화 분위기를 타고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수익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경영방침의 최고 목표로 삼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된다. 신자유주의화 된 금융회사들이 가계를 상대로 수익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신용카드 부실이 시작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20~30퍼센트 증가율을 보이던 신용카드 발급은 2000년 48퍼센트, 2001년 54퍼센트라는 유례없는 폭증을 기록했고 이는 신용카드 부실이 표면화되었던 2002년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17퍼센트로 주저앉게 된다. 그 결과 1999년까지 4천만 장 정도였던 신용카드가 불과 2년 남짓한 2002년에 1억장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가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를 풀어버림으로써 신용카드 대출 경쟁이 촉발되었으며 최고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 한 장으로 아무런 대출 상담 없이 인출이 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발전했다. 결국은 2002년 중반에 정부가 다시 한도 규제를 해야 했다.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현금 서비스)은 잔액 기준으로 1998년 10조 원대에서 2002년 하반기에 무려 60조까지 급격히 팽창한다. 4년 만에 무려 6배가 났 것이다

신용카드 대란이 터지기 직전인 2001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 연체율은 최저 수준이라고 말해도 좋을 2퍼센트 전후였다.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일반적 계산법으로는 당시에 신용카드 부실이 폭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본문

가계부채 부실의 원조,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

잠시 우리의 기억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유명 여배우가 고급스런 하루 일과를 즐기는 광고 장면이 TV 화면을 장식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하루 일상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또 다른 신용카드 광고에서 역시 유명 여배우가 “부자 되세요”라는 멘트로 화제가 되었고 한 동안 “부자 되세요”는 유행하는 새해 인사말이 되기도 했다. 모두 신용카드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2000년을 전후한 장면이다. 그 후 얼마 뒤 신용카드 대란이 터졌다.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단연 2003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이하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7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 문제가 다시금 사회 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부실이라고 하면 대개 기업 부실이었고 개인 부실은 큰 쟁점이 되지를 못했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주로 대기업들에게 자금을 풀어오는 식으로 대출을 확대했고 대부분 국민들도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 소비를 하기 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가계운용을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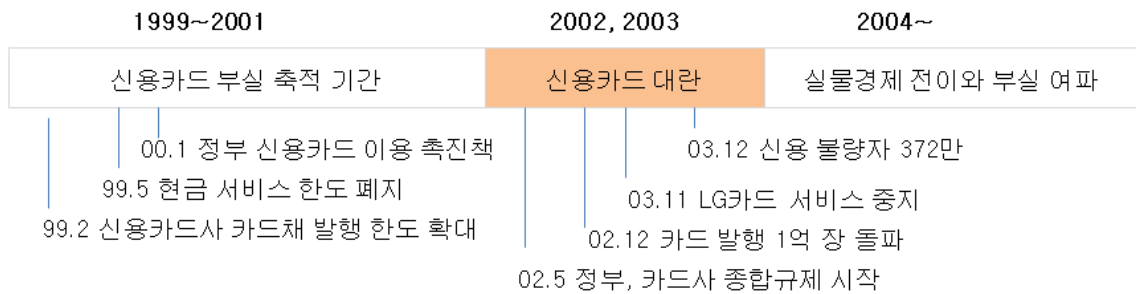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다. 1978년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도입된 이래 외환위기 시점까지 20년이 지났지만 발급된 신용카드는 4천 만 장을 넘지 않았다. 당시까지의 신용불량자 100만 명은 신용카드 연체 때문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지 못해 생긴 경우였다.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 개방화, 규제완화, 금융화, 노동유연화 등의 경제 환경 변화를 몰고 온 우리 경제의 신자유주의 전환이었다.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자유화가 추진되고 단기 수익성 추구가 최고의 기업 목표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다른 편에서는 노동 유연화로 인해 가계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부채를 끌어와 소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가계의 신용카드 부실이 쌓여갔던 것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치열한 과잉 경쟁 속에서 가계의 신용카드 부실이라는 약한 지반을 뚫고 최초로 가계 발 국내 금융위기가 터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돌아선 한국경제가 5년 만에 겪은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1호 째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97, 1998년 외환위기를 통과한 후 변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신용카드 부실이 어떻게 쌓여갔고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정부, 그리고 가계가 어떤 행동 양상을 보였는가. 어떤 요인들이 맞물려가면서 서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준 신용카드 부실 사태가 준비되었는지를 되돌아 보기로 하자.

신용카드 부실 사태의 전개 과정



우선 신용카드 부실 요인들이 축적되고 있었던 1999년에서 2001년까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보자. 2000년 IMF 부채를 갚고 외환위기를 졸업했다고 환호하던 시기, 경기 불황을 딛고 1999년 10.7퍼센트, 2000년 8.8퍼센트의 고성장을 회복했던 시기에 우리 경제 한 쪽에서는 신용카드 부실이 자라고 있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이 역사상 가장 낮은 2퍼센트 수준으로 내려왔던 2000년, 2001년 시기에 신용카드 부실 폭발은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신용카드 부실을 축적시켰던 4가지 경제 환경 요인이었던 1) 고용 구조 변화와 소득 불안정성, 2) 가계 부실의 길을 터준 금융 자유화와 규제완화, 3) 빠르게 내려간 금리, 그리고 4) 들뜨기 시작한 자산시장을 차례로 짚어보고, 이 환경 아래에서 금융회사들이 과거와 다르게 어떤 경영전략을 펼쳤는지,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짚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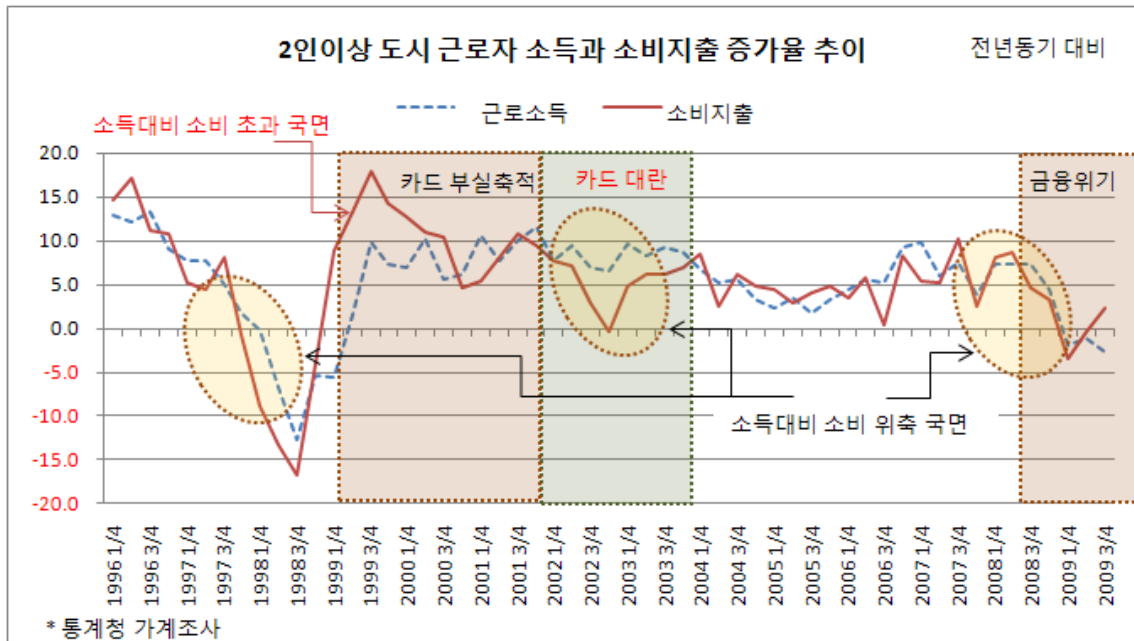
부실축적 환경요인 1) 고용 구조 변화와 소득 불안정성

은행 건전성의 기초가 안정적인 수신기반이고 기업 건전성의 기초가 탄탄한 영업실

적이라면 가계 건전성의 기초는 당연히 지속성을 지닌 노동소득이다. 가장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와야 가계 경제가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합법화되고 임시직과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가 일상화되는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로 고용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동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국면이 시작된다. 안정적인 노동소득에 의해 유지되어야 할 가계 건전성의 기초가 근본적으로 허약해진 것이다. 소득이 취약하니 빚을 늘릴 수밖에 없고 늘어난 빚을 갚을 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신용카드 부실사태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고용 불안 영향으로 소득은 늘어나지 않거나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손쉽게 대출을 받아 소비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소득 증가를 뛰어넘는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거꾸로 저축은 줄어나가는 가계 생활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부실이 축적되고 있었던 1999~2001년 시기에는 큰 폭으로 소득 증가를 뛰어넘는 소비 확대가 있었고 이는 신용카드 부실이 폭발되기 시작한 2002년이 되어서야 반전된다.(그림 참조)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수 국민들이 소득이 취약한 가운데 은행 빚을 얻어 집을 사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소비하고 할부 금융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세대가 만들어진 것이고 1999~2000년 벤처 열풍도 소비확대에 한 몫을 거들게 된다. 특히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들이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카드 사용을 늘리게 되었는데, 청년들은 벤처 거품이 꺼진 2001년부터 취업자가 감소세

로 돌아서는 국면을 맞는다. 신용카드 부실 폭발이 상당 부분 청년층에게 집중된 배경이다.

그렇다면 가계 부채가 다시 문제로 떠오른 2010년 지금은 어떤가. 지표 경기가 바닥을 지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예외적으로 고용회복 전망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일용직과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 직후보다 지금의 가계 건전성 기초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고용악화와 소득 불안은 일시적인 국면을 넘어 향후 수년 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 부실을 버틸 수 있는 토대가 대단히 허약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지표경기와 주식경기 회복을 좇아 소비가 소득보다 앞질러 뛰어오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10년 전 신용카드 부실이 축적되던 시기에 비해 결코 낫다고 할 형편이 아닌 것이다.

부실축적 환경요인 2) 가계 부실의 길을 터준 금융 자유화, 규제완화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이자 대세는 규제완화와 자유화, 시장화였다. 경제에서 신자유주의가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금융부분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신용카드 시장에서 빠르게 현재화되었다.

경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금융 규제완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신용팽창욕구를 실현할 최적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준다. 신용카드와 관련한 주요 정부 규제완화 조치를 살펴보자.

우선 정부는 1999년 2월, 수신 기반이 없는 신용카드사들로 하여금 외부 차입을 확대해서 가계 신용대출을 팽창시킬 여건을 만들어준다. 신용카드사들이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카드채를 발행해서 채권시장에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이른바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시켜준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신용카드사들은 공격적인 카드 영업을 할 수 있는 실탄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1999년 5월, 최고 70만원까지로 묶여있던 신용카드사들의 현금 서비스 한도를 철폐함으로써 신용카드 대출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통로마저 열어준다. 그 결과 신용카드 부실 폭발

이 시작된 2002년 초반까지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현금 서비스 한도가 최고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은행에서 복잡한 대출심사를 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한장으로 간단히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전철 역 ATM 단말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2003년 신용카드 부실 폭발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단순한 신용카드 이용 증가 때문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폭증 때문이었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조세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아래 국민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이용을 장려하는 촉진 대책을 쏟아냈는데 1999년 9월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2000년 1월 이른바 ‘카드 영수증 복권제’라는 아이디어까지 동원된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란, 1만 원 이상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추첨해서 최고 1억 원의 상금을 주는 제도였다.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하여 조세 세원 파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국세청이 주관해서 2000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이고 2006년에 가서야 폐지된다.

신용카드사들에게 자금을 조달할 길도 열어주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을 늘릴 길도 확대해준데 이어 아예 정부 차원에서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이용 촉진정책으로 신용카드 부실이 급격히 누적되고 위기조짐을 보이자, 2001년부터 다시금 감독 강화와 규제조치를 내놓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때늦은 소극적 규제는 신용카드 부실을 폭발시키는 기폭제로 되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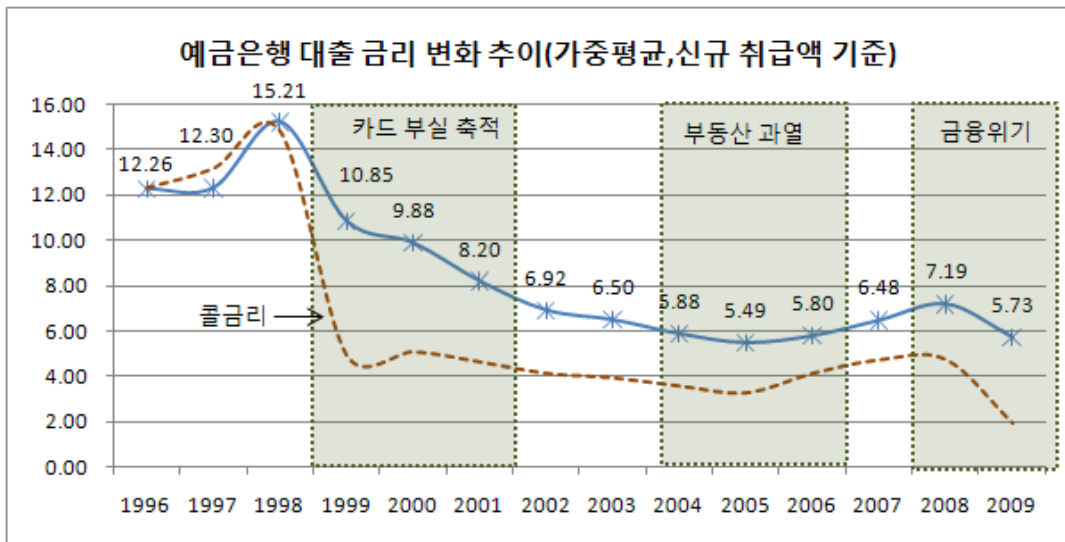
2010년 오늘의 상황은 어떤가. 10년 전인 2000년 전후만 하더라도 한국경제에서 신자유주의는 확고한 대세였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일종의 ‘표준’으로 간주되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엄청난 후과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규제에 대해 폭 넓은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금융 규제완화’라고 하는 정책기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 역시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문제의식도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부 태도를 보건데 신용카드 부실이 축적되고 있는 당시에 비교하여 가계 부채 부실 가능성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부실축적 환경요인 3) 빠르게 내려간 금리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의 결정적인 요소가 금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저금리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낮은 금리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 IMF의 요구에 따라 고금리와 긴축정책을 실시하다가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되고 부실이 확대되자, 1998년 하반기부터 콜금리(지금의 기준금리)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1999년 3월 이후에는 5퍼센트 미만으로 떨어뜨리면서 빠른 속도로 금리인하를 단행한다. 그에 따라 시중 대출 금리도 10퍼센트 밑으로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선다.(그림 참조)



신용카드 부실 축적은 시중 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타는 시점에서 준비되고 있었고, 금리 하락 환경에서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늘려 대출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가계 입장에서조차 이자비용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을 확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서 짚어둘 것은 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가 1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은행 대출 금리가 8퍼센트 수준이었던 2001년 당시 신용카드사들의 현금 서비스 이자는 무려 15~25퍼센트로 매우 높았고, 당시 신용카드사들의 회원 분류기준 상 80퍼센트 이상의 회원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20퍼센트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것이다.

당시 신용카드 회사들의 평균 조달 금리가 7.4퍼센트였던 것을 기억할 때 이들의

예대 금리차는 무려 13퍼센트 전후가 된다. 신용카드 대출이 상대적으로 고위험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용카드사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카드 대출을 한 서민들의 부담이 컸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

그렇다면 2010년 현재 시점은 어떠한가. 2010년 2월 현재는 1년 동안 기준금리가 2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역사상 최저 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설령 한국은행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1퍼센트 정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고금리가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워낙 고용여건 등이 악화되어 있어 가계가 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고, 정부가 예대출(대출/예금)을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하고 100퍼센트 미만으로 관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은행들도 예금 수신 규모를 뛰어넘는 갑작스런 대출 확대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순전히 금리만 놓고 보면 대출 확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

부실축적 환경요인 4) 들뜨기 시작한 자산시장

지금까지 금융 자유화와 금융회사들의 매출경쟁은 대부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의 거품을 수반해왔다. 신용카드 부실이 축적되던 1999~2001년 시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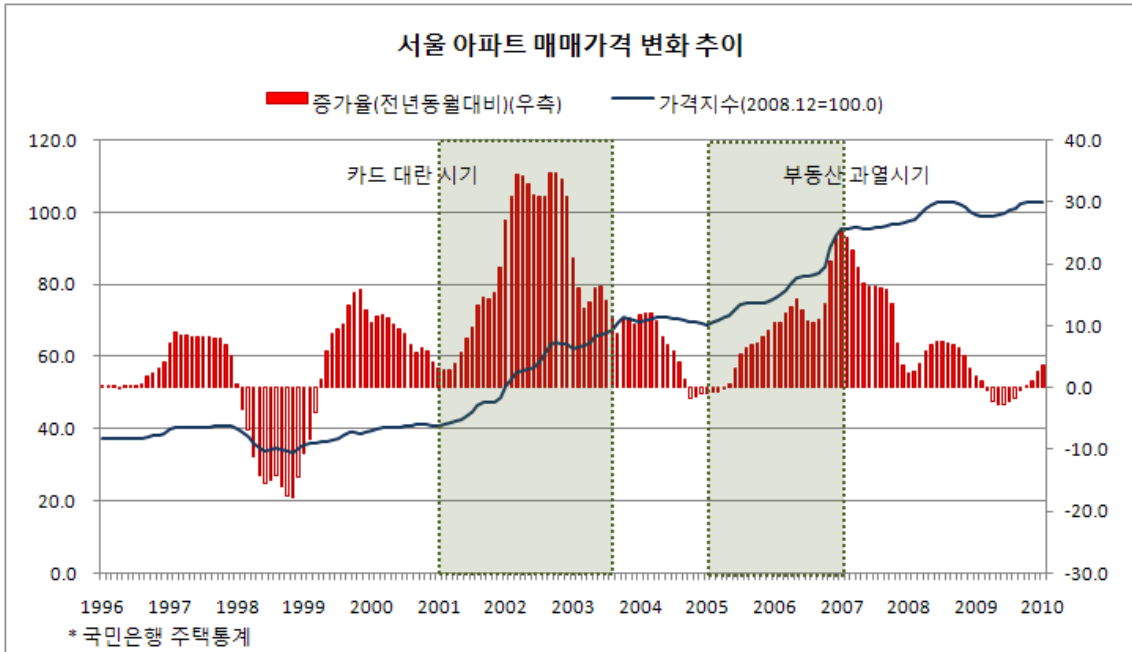
금리 인하 환경아래에서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성 추구 경향은 주택 담보대출을 대거 늘리게 하였는데 이는 예금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이 1999~2002년까지 연 평균 40~50퍼센트씩 늘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하여 신용카드 부실이 터진 2002~2003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으로 한 해 동안 30퍼센트 이상씩 오르는 경이적인 폭등세를 기록한다. (그림 참조)

부동산 가격상승은 한편에서는 담보가치 상승에 따른 대출규모 확대를 촉발하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을 수반하면서 전반적인 금융 대출을 키우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2002~2003년에 부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간접적으로 가계의 대출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자 비용을 가중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카드대란 와중이었던 2003년 9월말 현재 가계 금융부채는 약 440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2년 말의 2배가 넘는 규모였던 것이다.

이후 신용카드 대란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대출과 부동산 경기는 2005~2006년 동안 재차 폭등하면서 부동산 거품 우려와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우

1)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종합대책”, 2002.5

려를 낳게 되는데 그 시원이 바로 2000년을 전후한 부동산 담보 대출의 팽창이었다. 당시에 곧바로 부실이 터지지 않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부실 위험을 누적시키게 된 것이다.



2010년 상황은 어떤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꺾였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담보 대출은 2009년 2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자 다시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한다. 이는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담보대출이 크게 꺾어나가고 있는 미국 등 세계적인 추세와는 다른 것인데, 아예 부동산 시장 과열을 걱정할 정도가 되면서 급기가 정부마저 2009년 7월, 9월, 10월 잇달아 대출 규제에 나서야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 확산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제 완화와 재건축 규제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미 예고되어왔던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계 부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신용카드 부실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핵심으로 한 은행 대출 부실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부실이 현재화 되는 ‘거품 붕괴형 부실’이 될지, 아니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부담에 비해 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될 정도로 가계의 소득구조가 허약해지는 ‘불황형 부실’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규제완화 정책을 편 결과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은 확실하다.

요약해보자.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는 주도적으로 신용카드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쪽에서는 구제 금융으로 자본을 확충한 금융회사들이 공격적으로 가계를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가 소득불안으로

취약해진 구매력을 신용카드로 대체해서 소비를 늘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신용카드 부실을 예비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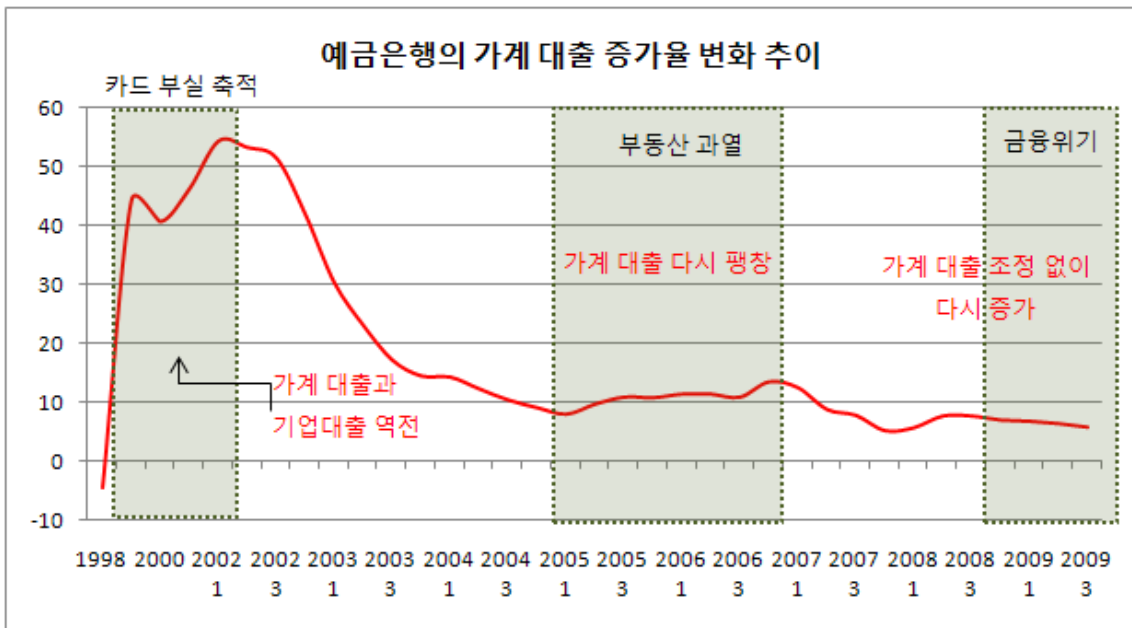
평범한 한국 가정을 상대로 시작된 금융 수익 쟁탈전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규제완화 분위기를 타고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수익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경영방침의 최고 목표로 삼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된다. 신자유주의화 된 금융회사들이 가계를 상대로 수익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신용카드 부실이 만들어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특히 외환위기로 심각한 부실에 빠진 금융회사들은 정부가 투입한 전체 공적자금 150조 가운데 무려 100조 원을 수혈 받아 자금 여력을 확보한 후, 외환위기 이전의 기업대출 위주의 영업방식을 버리고 기업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마진이 높은 소매영업(가계 대출)을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 가정이 금융회사 매출 경쟁의 목표가 된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체의 가계 대출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말까지만 해도 전체 대출의 1/3 수준인 35퍼센트였다. 그러나 신용카드 부실 축적이 막판에 다다른 2001년 3분 기준으로 가계 대출 비중이 51.3퍼센트를 돌파하면서 처음으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을 넘어서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할부 금융사, 보험사가 모두 소매금융을 중점 영업 전략으로 채택하는가 하면, 이자가 싼 일본자금을 가지고 국내에 진출한 일본 대부업체들마저 여기에 가세한다. 외환위기의 끔찍했던 터널에서 한숨 돌린 평범한 한국 가정을 상대로 금융회사들의 수익 쟁탈전이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카드 부실이 축적되고 있었던 1999~2001년 동안 은행의 가계 대출은 연간 40~50퍼센트 이상씩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고 신용카드사의 대출도 그 뒤를 이어 팽창하게 된다.(그림 참조) 당시 전체 금융회사로부터 가계에 풀려나간 대출금액 증가율은 1999년 26퍼센트, 2000년 49퍼센트, 2001년 62.5퍼센트, 그리고 2002년에는 87.6퍼센트 증가율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계 대출 증가세를 기록하게 되었다. 광란의 가계 대출 팽창은 신용카드 부실이 폭발 후반기인 2003년에 겨우 진정되었다.



국민의 세금에 다름 아닌 공적자금 덕택에 외환 위기에서 벗어났던 은행들과 금융회사들이 공적자금을 실탄삼아 가계 대출을 공격적으로 벌여 신용카드 부실사태를 만들었던 것이다. 정부의 지원 덕택에 2009년 최악의 금융 위기를 피한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자 2010년부터 다시금 수익성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향방은 10년 전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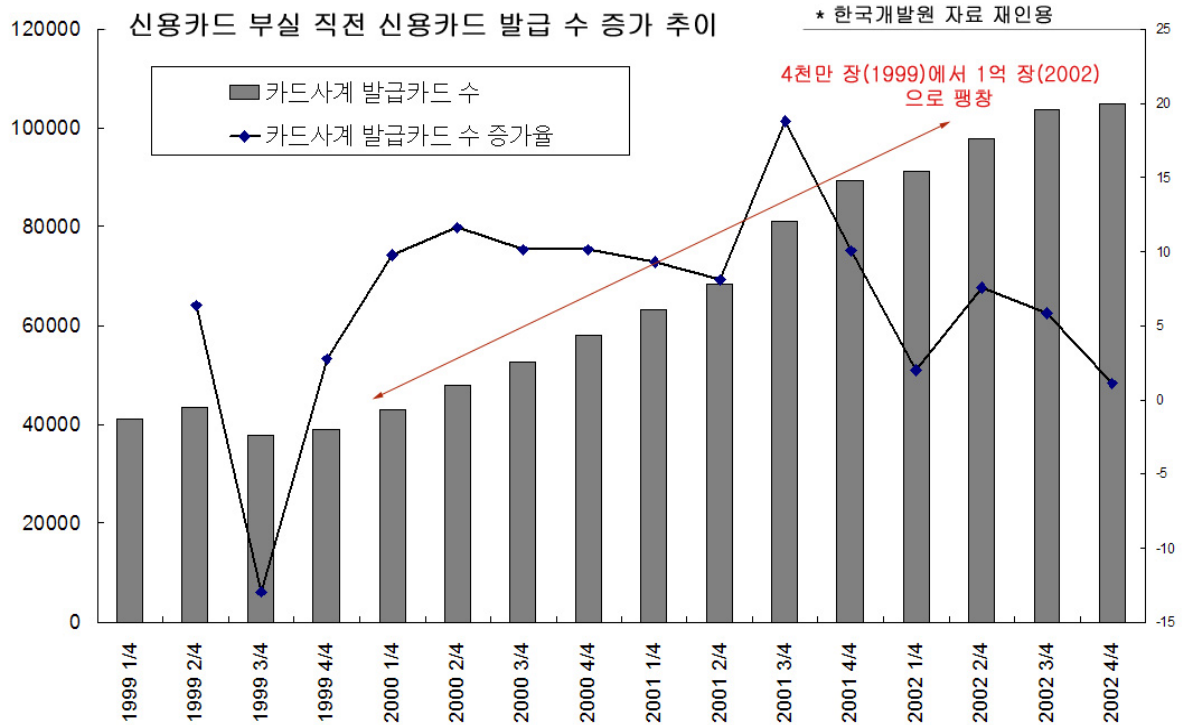
2년 만에 4천 만장에서 1억 장으로 늘린 신용카드사 매출 경쟁

가계를 대상으로 한 수익 쟁탈전에서 초반 스피트를 올린 것은 순발력이 강한 단거리 주자인 신용카드사였다. 특히 매출을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신용카드사들이 당시에 벌인 출혈 경쟁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제대로 된 신용평가는 고사하고 소득도 없는 학생들에게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던 ‘길거리 모집’이 횡행했다. 서로 카드 회원을 늘리기 위해 가입회원에게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것도 일반화되었다. 너도 나도 ‘무이자 할부’ 행사를 일상화시키기도 했다.

특히 국내 유력 재벌 대기업들의 계열사로 있었던 전업 카드사들의 회원확대 경쟁은 도를 넘는 것이었다. 당시 발급된 1억 장의 카드 가운데 전업 카드사(10개사)가 발급한 것이 2/3를 넘는 7500만 장을 차지했고 은행 카드 사업 부문(14개)에서 발급한 것이 3000만 장이었던 것이다.²⁾

2) 한국금융연구원,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2004.4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20~30퍼센트 증가율을 보이던 신용카드 발급은 2000년 48퍼센트, 2001년 54퍼센트라는 유례없는 폭증을 기록했고 이는 신용카드 부실이 표면화되었던 2002년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17퍼센트로 주저앉게 된다. 그 결과 1999년까지 4천만 장 정도였던 신용카드가 불과 2년 남짓한 2002년에 1억장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그림 참조)



신용카드 부실 사태가 잦아든 이후 한 동안 신용카드 수자는 대폭 줄었고, 그 수가 다시 1억 장을 돌파한 것이 7년만인 2009년 9월이었던 것을 비추어보면 당시 얼마나 심각하게 신용카드 경쟁이 있었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2009년 9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271만장으로 1년 전에 비해 9.6퍼센트 늘어남으로써 1억장을 재 돌파한다. 이것마저 일반적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팽창의 요인이 컸다.)

신용카드사 회원 수와 카드 발급 수의 폭증은 당연히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의 기하급수적 팽창으로 귀결되었다. 보통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상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부가적으로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ATM 단말기 등을 이용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결제(판매신용)와 현금서비스(카드대출)가 급팽창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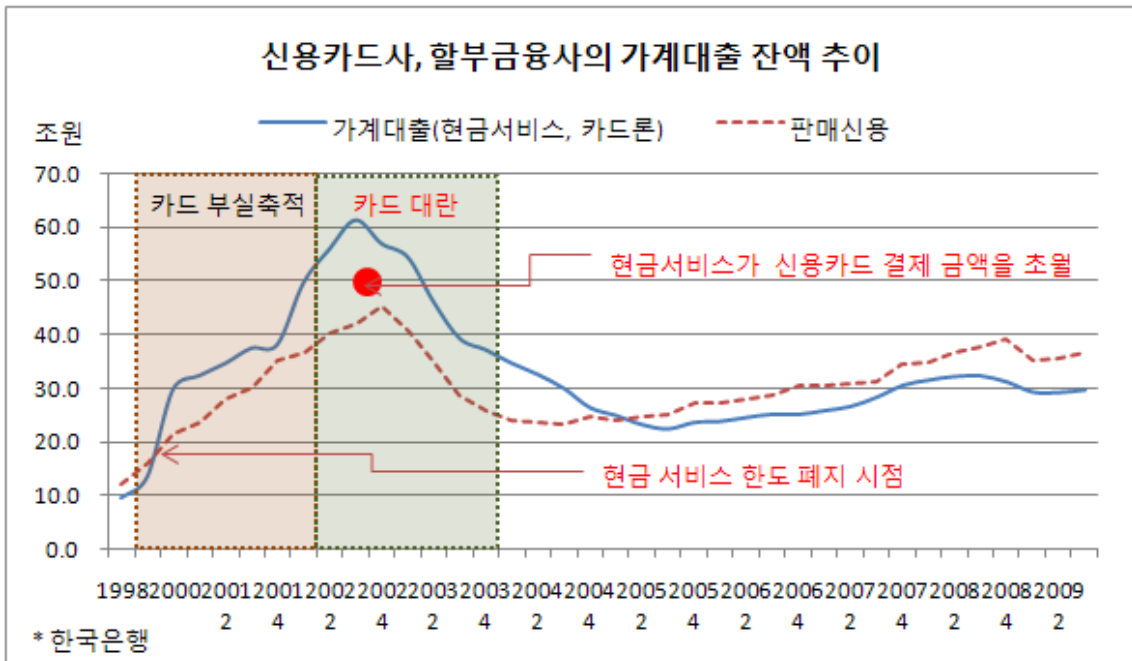
우선 국민들이 소비를 할 때 현금소비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은 2002년 말 기준으로 전체 소비의 75.2퍼센트를 차지게 된다. 이는 1997년 12.7퍼센트와 비교해도 놀라운 변화이며 심지어 신용카드 천국인 미국의 75퍼센트보다도 많은

것이였다. 구매하는 상품 금액의 2/3을 카드로 결제한다는 얘기다.³⁾ 당시 한국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1년 기준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⁴⁾

6배로 늘어난 신용카드 대출

그런데 신용카드 부실이 폭발했던 것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이 아니다. 부실 폭발의 도화선은 일종의 부가 서비스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대출, 즉 현금 서비스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신용카드 이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현금 서비스 보다는 신용카드 결제(신용판매)를 장려해 세원을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이 컸겠지만 수익성을 제 1목표로 했던 신용카드사들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신용카드사들은 치열한 회원경쟁과 할인 경쟁의 와중에서 2퍼센트 정도의 낮은 가맹점 수수료나 무이자 할부 서비스 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신용판매 서비스(신용카드 결제) 보다는, 15퍼센트 이상의 예대 마진을 보장해줄 정도의 월등히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현금 서비스로 점점 더 쏠리게 된다. 신용카드 본래 기능인 신용카드 결제보다 일종의 부가 기능인 현금서비스가 급성장했다는 얘기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를 풀어버림으로써 촉발되었

3) 엘지경제연구원,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의 교훈”, 2003.4

4) 삼성경제연구소, “신용사회 정책을 위한 제언”, 2003.12

으며 최고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 한 장으로 아무런 대출 상담 없이 인출이 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발전했다. 결국은 2002년 중반에 정부가 다시 한도 규제를 해야 했다. 어쨌든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현금 서비스)은 잔액 기준으로 1998년 10조 원대에서 2002년 하반기에 무려 60조까지 급격히 팽창한다. 4년 만에 무려 6배가 났 것이다.(그림 참조)

그렇다면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카드 대출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신용카드사들은 어디서 조달했을까. 신용카드 회사나 할부 금융사는 예금을 받을 수 없는 ‘여신전문 업체’가 아니던가. 당연히 차입을 해야 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유명해진 ‘레버리지’를 확대한 것인데, 2002년 말 현재 전업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11.4배로 당시 미국 전업카드사들 레버리지 비율 7배보다 훨씬 높았다.⁵⁾

이 역시 정부가 1999년 2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허용해 준 덕분이었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은 안이하게도 단기차입을 급팽창시켰는데 엘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전업 카드사가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80조 원 가운데 60퍼센트가 1년 미만의 단기 차입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험한 자금 조달로 위험한 대출 행위를 수년간 지속시켰던 것이고 그 결과가 2002~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였다.

신용카드 부실전야, 주요 지표는 나쁘지 않았다.

이상으로 370만 인구를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국민경제를 뒤 흔들었던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외환위기 이후 1999~2001년 동안어떻게 준비되고 있었는지를 짚어보았다.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와 자유화 바람을 타고 대형 신용카드사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촉진시켰는지, 그 결과 부실이 어떻게 폭발 직전까지 누적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과 2010년 오늘의 환경이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축적기와 2010년 비교

	1999~2001 신용카드 부실 축적기	2010년 가계 부채 위험시기
국민의 소득 여건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불안정	-고용 악화와 소득 불안정 심화
금융 환경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대세 -정부의 신용카드시장 규제완화	-글로벌 금융 규제 움직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지속
금리 환경	-빠른 금리 하락세 시작	-역사상 최저 금리 유지
자산시장	-부동산시장 과열 시작	- 부동산 가격 조정 없이 재상승
금융회사	-소매영업 경쟁 가속	- 소매영업 경쟁 재개 움직임

5) 엘지경제연구원,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의 교훈”, 2003.4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둘 것이 있다. 신용카드 부실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00년, 2001년까지만 해도 가계 부채에 관한 대표적 지표들은 신용카드 부실 사태를 예고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소득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 상환비율은 2000년에는 10.5퍼센트, 그리고 2002년에는 아예 9퍼센트로 떨어지는데 이는 당시 미국의 14.1퍼센트보다 낮은 것이었다. 또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는 2000년 기준 90퍼센트 정도여서 미국의 114퍼센트, 일본의 121퍼센트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었다. 우리나라의 2009년 현재 140퍼센트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음은 물론이다.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신용카드 대란이 터지기 직전인 2001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 연체율은 최저 수준이라고 말해도 좋을 2퍼센트 전후였다.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일반적 계산법으로는 당시에 신용카드 부실이 폭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의 안이한 인식은 완전히 유사하다. 최근 가계 부채 부실 위험이 제기되자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세, 낮은 담보인정 비율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은행권의 상환압력 증가 및 이에 따른 가계 채무상환부담 급증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⁶⁾ 외형 지표만 보고 안이하게 판단했던 정부의 태도로 인해 7년 전 ‘국내적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세미 버전(semi-version)은 그렇게 예고되었다. 지금 가계 부채 부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7년 전과 같이 신용카드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여하튼 외환위기를 신자유주의 수용으로 해결했던 당시 국민의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이른바 ‘생산적 복지’를 제창하며 신자유주의로 피해 입은 서민들을 향한 정책을 폈지만, 뒤편에서는 서민 생활에 치명적인 고통을 가할 가계 신용카드 대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대단한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책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 정책과 서민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1950년 미국 사업가 프랭크 맥나라마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된 신용카드(다이너스 카드)는 1978년 한국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25년 만인 2003년에 가계 신용부실 대란의 도구가 된다.

6) 금융위원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현황 및 리스크 평가”, 2010.1.19

<참고 문헌>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종합 대책”, 2002.5
금융감독원,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2003.8
한국은행, “가계 신용동향” 2001~2004년도 각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2004.4
한국금융연구원, “가계의 금융부채현황”, 2004
한국개발연구원,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향”, 2003.8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 급증의 부작용과 대책”, 2002.2
삼성경제연구소,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언”, 2003.12
엘지경제연구원,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의 교훈”, 2003.4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국민은행 주택통계

